

중국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China'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Japan's products

최창환(Chang Hwan Choi)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 결과 |
| II. 일·중 무역 및 반덤핑 규제 현황 | V. 결론 |
| III.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과와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중국의 거시경제변수, 반덤핑, 중·일 무역, 수입침투도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론

중국은 작년 GDP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국가가 되었으며,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상호 경쟁관계 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의 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부터 일·중 양국간 교류관계가 촉진되었고, 정부와 민간 교류협력 증대로 인해 양국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일·중 양국의 산업구조 보완으로 양국의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중국은 이미 일본 최고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은 의류, 방직제품 등의 산업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까지 TV, 핸드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 등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양국은 당분간 무역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경우 매년 대일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 점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의 무역분쟁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역사문제, 타이완 문제, 조어도 영유권 분쟁 문제 등이 민감한 문제로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대 일본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제수지 부분에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WTO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반덤핑 규제,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을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세장벽 보다는 주로 비관세 장벽인 TBT¹⁾, 식물검역, 농산물 안전, 지식재산권²⁾ 등의 조치로 대 중국 물품수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 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1) TBT는 무역상 기술장벽협정이라고 한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는 UR협상에서 마련된 협정이다. 선진 공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2)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반덤핑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I 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 II 장에서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특징과 일·중 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는 반덤핑 규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제 IV 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 V 장은 결론 및 시사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II. 중국 반덤핑제도의 특징 및 중·일 무역 현황

1. 중국 반덤핑제도의 특징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국 내의 수입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덤핑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에 관한 기본법은 대외무역법이며³⁾, 이 법은 1994년 6월 1일에 제정되었고, 2004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다.⁴⁾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대외통상에 관한 기본법으로 총칙, 대외무역경영자, 상품수출입 및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 대외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대외무역질서, 대외무역조사, 대외무역규제, 대외무역촉진, 법률책임, 부칙 등 총 1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법의 설립목적으로는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선언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의 정의를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이라 내리고 있다.⁵⁾

중국 반덤핑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외무역법 중 “우회방지와 보복조치”로 이 규정은

3)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Foreign Trad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법의 범원은 헌법, 법률(특별행정구 법률 포함), 행정법규, 지방성법규·민족자치법규·경제특구의 규범성문헌, 규칙,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으로 대별된다.

4) 대외무역법은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2호로 공포되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수정되었다.

5) 대외무역법 제1조 및 2조.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적용범위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시하고 별도의 장을 두어 지적권 보호를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2조 및 제5장 참조).

어떤 국가(지역)가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복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문제점을 살펴보면, WTO 반덤핑협정 제2조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거래 단계, 거래시기, 판매조건 차이 등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중국 반덤핑조례 제6조는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치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비교성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덤핑 마진 산정이 자의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중국 반덤핑조례의 내용이 모호하게 기술됨에 따라서 중국 당국에 의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2. 중·일 무역현황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은 대 일본 무역에 있어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중국은 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매년 확대되었다. 이렇게 큰 적자폭을 나타내는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로 인해 중국의 수출량이 많이 줄어 든 요인이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수록 관련 부품에 대한 대일본 수입이 늘어나는 등 산업내 무역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분석된다.

〈표 1〉 대 일본 교역량 추이

(단위 : 천USD)

년 도	대일 수출	대일 수입	중·일무역수지
1989	1,533,032	1,165,512	367,520
1990	1,731,943	883,422	848,521
1991	1,914,847	1,156,696	758,151
1992	2,144,777	1,510,321	634,456
1993	2,278,026	1,911,297	366,729
1994	2,811,395	1,913,705	897,690
1995	3,380,882	2,061,960	1,318,922

1996	4,399,676	2,382,363	2,017,313
1997	5,061,673	2,630,721	2,430,952
1998	29,520,199	28,306,763	1,213,436
1999	32,419,644	33,778,002	-1,358,358
2000	41,611,048	41,520,271	90,777
2001	45,078,176	42,810,261	2,267,915
2002	48,483,031	53,489,038	-5,006,007
2003	59,453,989	74,204,074	-14,750,085
2004	73,536,263	94,191,670	-20,655,407
2005	84,097,189	100,467,562	-16,370,373
2006	91,771,960	115,810,926	-24,038,966
2007	102,116,307	133,903,261	-31,786,954
2008	116,176,472	150,634,070	-34,457,598
2009	97,209,002	130,748,704	-33,539,702
2010	120,262,333	176,304,026	-56,041,69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에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3. 반덤핑 규제 현황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WTO 반덤핑 분야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총 804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590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총160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고, 그 중 113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⁶⁾

중국은 WTO 가입한 후 반덤핑 조사와 조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반덤핑 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유치산업 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2010년에는 조사와 조치건수가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반덤핑 조사와 조치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본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6)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통계자료를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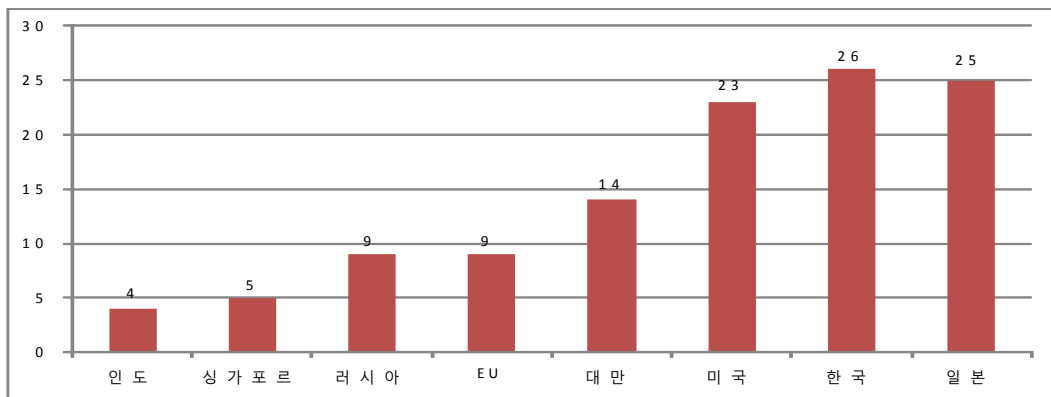
〈표 2〉 일본과 중국의 반덤핑 조사건수 및 조치건수 현황 비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중 국	조 사	20	43	33	28	42	44	55	51	53	49	56	72	62	76	77	43
	조 치	26	16	33	24	21	30	32	36	41	44	41	38	48	53	55	52
일 본	조 사	5	6	14	14	22	12	14	13	16	9	7	11	4	3	5	5
	조 치	5	6	5	9	11	22	9	5	11	6	7	8	4	4	0	1

자료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자료에서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중국정부의 외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에 대해 25건, 한국에 대해서는 26건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23건, 대만 14건, EU가 9건, 러시아가 9건, 싱가포르가 5건, 인도가 4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현황



자료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에서 저자 작성

일·중 반덤핑 조치 현황을 상호 비교하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중국정부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31건이며, 조치건수는 25건인 반면에, 일본정부의 대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조치건수는 각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은 대 일본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보다는 세이프 가드나 비관세 장벽을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양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일·중 반덤핑 조치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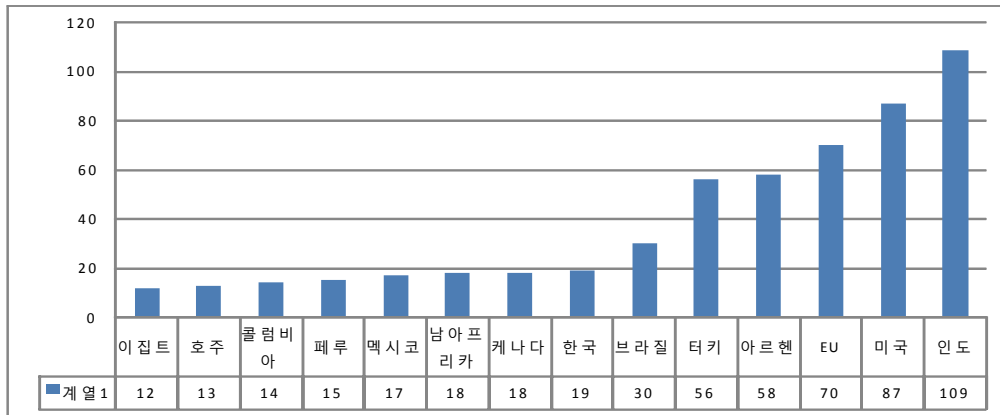
반덤핑 현황	조사건수	조치건수
중국의 대 일본제소	31	25
일본의 대 중국제소	1	1
합 계	32	26

자료 : WTO 통계자료에서 저자가 정리

한편, 국별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인도, 미국, EU 및 터키 등 나라가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에 대한 조사를 증가시키는 추세이고, 그 중 인도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비중이 가장 크다. 1995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인도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09건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한 국가이다.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87건으로 인도에 이어 2번째로 반덤핑 조치를 많이 발동한 국가이다. EU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70건으로 발동건수 기준으로 3번째 국가이며, 아르헨티나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58건이며 4번째 국가이다. 한국에 경우는 7번째로 반덤핑조치를 많이 발동한 국가이다.⁷⁾

7) 최창환,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국제상학』 제26권 제3호, 2011.9. p. 159.

〈그림 2〉 對 중국 반덤핑 조치 국가별 현황



자료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에서 저자 작성

III.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1. 선행연구 검토

그간의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거시경제 변수가 그 국가의 반덤핑 부과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대상국가도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미국이 상품무역에 있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무역수지에서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산업에서의 도산증가와 이로 인한 실업률 증대가 미국으로 하여금 반덤핑 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추정된다.

두 번째로 큰 주류를 이루는 것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정치 환경적 요인분석을 통해 반덤핑 조치가 산업과 국가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던 반덤핑 제소로 이끄는 경제 환경적인 결정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일국이 처하고 있는 산업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특정산업의 수입의존도(수입침투도)가 매우 높다든지 그로 인하여 수입의

8) Blonigen, Bruce A. and Thomas J. Prusa(2001) 및 김용대(2011) 논문에서 재인용.

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의 고용수준이 취약해지는 경우에 동 산업의 보호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 수 있다. 또한 특정산업의 자본저량 및 집약도가 약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하더라도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 질 것이다.⁹⁾

둘째, 반덤핑과 관련된 각종 보호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법률적인 규정이 존재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할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의 덤핑수출 기업의 형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과거에 실행에 옮긴 반덤핑 조치의 결과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의 준거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준거는 기업의 전략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반덤핑 조치에 대한 법률규정·전담부서 등의 존재는 기업의 시장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에 내생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충분히 덤핑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주로 불완전 경쟁시장 형태 모델로 기업 간 담합이 있는 경우와 담합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되어졌다.¹⁰⁾

셋째, 반덤핑 제소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환율, GDP, 실업률, 수입의존도 등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은 국가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시경제변수가 변하는 경우 일부 산업은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의 덤핑수출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산업은 더욱 민감하게 거시경제변수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만일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반덤핑 관정을 내리는 행정당국이 이용하는 국내외 자료에 영향을 미쳐 덤핑마진율이 더 크게 나타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¹¹⁾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수입제한효과, 제소의 경제적 효과, 제소의 결정요인 분석 등에 논문이 많이 있다. 또한, 반덤핑 제도와 법체계, 사례연구 중심으로 WTO 규정과의 비교연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나라의 경제변수가 반덤핑 규제 및 조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들이며, 본 논문과 같이 중국정부의 반덤핑 규제 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¹²⁾

9) 이러한 주제로 연구한 이들은 Finger(1981), Feinberg and Hirsch(1989) 등이 있다.

10) 외국 기업과 국내기업과의 담합이 없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Leidy and hoekman (1990), Fischer(1992), Reitzes(1993) 등이 있고, 담합이 있는 경우의 연구는 Staiger and wolak(1992), Prusa(1992), Panagariya and Gupta(1998) 등이 있다.

11) 이와 같은 거시경제변수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Feinberg(1989), Knetter and Prusa(2000), Mah and Kim(2006)의 논문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로는 실질 GDP 증가율과 실업률, 중국의 무역수지, 일·중 무역수지 및 중국의 수입침투도를 사용하고자 한다.¹³⁾

우선 실업률이 증가하면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책(Second Best Policy)으로 무역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rugman, Obstfeld and Melitz 2011)

가설 1. 중국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중국정부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일국의 GDP 성장이 둔화될수록 정부는 강력한 무역정책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수입을 규제하려는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일국의 정부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경기를 회복하려는 욕구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Knetter and Prusa 2003)

가설 2.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저조할수록 중국정부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될 것이다.

셋째로, 일국의 전반적인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외국에 대한 제품의 수입규제를 통해 경상수지에 있어서 균형을 달성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되면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kacs 1981, Moore 1992, Michael & Thomas 2000)

12) 최근 이서영(2011) 등이 중국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 있다.

13) 이 연구모형 부분은 최창환(2011) 논문의 모형을 참조 및 인용하였음

가설 3.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클수록 중국정부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될 것이다.

넷째로, 일국의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그 특정 국가제품의 수입규제를 통해 그 특정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 양국간의 경상수지에 있어서 균형을 달성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되면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kacs 1981, Moore 1992, Michael & Thomas 2000)

가설 4.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클수록 중국정부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될 것이다.

수입침투도는 외국의 상품이 내수시장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제품 수입액÷(국내생산액 + 수입액 - 수출액)으로 계산한다. 이처럼 수입침투도가 높을 경우 국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일국의 무역정책은 수입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동인이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마재신 2000, 이서영 2011)

가설 5. 중국의 수입침투도가 높을수록 중국정부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 건수가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영향 받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Y = \alpha + \beta RGDP_t + \gamma UI + \delta TB + \epsilon BTB + \zeta IPM + \mu t$$

여기서,

Y는 중국의 대 일본 반덤핑 규제건수

RGDP는 실질 GDP 증가율

UI는 실업률

TB는 무역수지

BTB는 일·중 무역수지
 IPM은 수입침투도(명목수입액/명목GDP)
 μ 는 오차항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되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객관적 자료, 일본 재무무역통계 사이트에 발표 자료를 주로 인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건수는 WTO 반덤핑 규제 자료(<http://www.wto.org>)를 이용하였으며, GDP성장률, 실업률, 무역침투도, 중·일 무역수지는 일본 재무무역통계 자료(www.customs.go.jp)를 이용하였으며, 무역수지는 World bank 자료(www.data.worldbank.org)를 인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분석결과

전장에서 추정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분기별 자료를 SPSS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 실업률의 경우,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초 연구모형 설정 시 추정된 가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일본국가에서 수입제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수입된 상품이 중국 내에서 동종 경쟁기업에게 입힌 큰 피해로 인해 실업자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된다. 이로 인해 반덤핑 규제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국의 GDP의 경우,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수출량이 증가할수록 GDP도 증가한다. GDP의 증가로 인해 중국정부가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대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

핑 조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중 무역수지 부분에서 중국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수입침투도가 높을수록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강화된다는 가정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1

모형	B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상수)	-3.611	1.331	-2.713	.008
GDP	.147	.096	1.533	.132
실업률	.976*	.366	2.666	.011
무역수지	-.002	.001	-0.380	.225
일중무역수지	.001*	.000	2.159	.002
수입침투도	-.012	.009	-1.271	.210

*, **는 각각 5%, 10%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2

R2	유의확률	Durbin-Watson
.463	.043	2.032

〈표 4〉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0.851	5	2.170	2.507	.043
	잔차	39.822	46	.866		
	합계	50.673	51			

2. 시사점

2011년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이후 세계경기는 올해도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수출증대와 내수산업 발전을 통해 이번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무역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또한 수출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을 저하와 함께 공장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해 고용을 제고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그간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 무역역조를 해소하고 자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일본과 한국산 제품 수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국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번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중 반덤핑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 중국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점이 중국정부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반덤핑제도 문제점 중 덤핑마진의 계산방법이 모호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WTO와 중국 반덤핑조례의 덤핑마진 비교를 살펴보면, 중국 반덤핑조례는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판매조건, 조세, 거래단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한·중 FTA 협상시 무역구제 분야에서 중국의 반덤핑 제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중국의 실업율이 높을 경우에는 단순 수출보다는 중국이 미국 등에 수출하는 물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분 위주의 산업내 무역을 통해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를 피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 번째로 한·중 양국간의 무역구제 조사전 통보하고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양국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전 협의하여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6월에 중국의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 뿐 아니라 31.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등 고가제품

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함으로써 향후 있을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무역분쟁 리스크 부담 위험을 줄이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V. 결론

중국은 매년 일본에 대해서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양국간 무역마찰의 소지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중 양국 간에 조어도 문제 등의 정치적인 갈등 요소도 내재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들이 중국의 대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커 질수록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국의 GDP 및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중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의 수입침투도가 높을수록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강화된다는 가정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GDP,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자의적이

고 지속적인 반덤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반덤핑 분야 협상시 반덤핑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무차별적 보복금지 조항 신설, 반덤핑 관련 사전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타결시킴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규제 위협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논문은 반덤핑 부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곽노성, “FTA 체결(예정)국가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 인도, 중국, EU”, 「무역위원회 용역자료집」, 2010.
- 김기홍, “한·중 FTA 무역 구제 협상 전략”, 「무역위원회 용역자료집」, 2008.
- 김용대, “거시경제 변수가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개시에 미치는 영향”, 공정무역연구 2011년 6월호. 통권 제 41호. 2011.
- 나수엽, “중·미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격화의 경과와 배경”, 「KIEP 지역경제 포커스」, 10-17호, 2010.
- 마재신,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 「재정연구」, 제6권 제2호, 2000.
- 이서영,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 정지원·박혜리·여지나, “한·중 FTA 반덤핑분야 : 제도 및 예상쟁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3호, 2010.
- 최창환,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국제상학」 제26권 제3호. 2011.9.
- Aggarwal, A., “Macro Economic Determinants of Antidump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2). 2004.
- Aradhna Aggarwal, “Macro Economic Determinants of Antidump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ew Delhi, India. 2004.
- Blonigen. Bruce A. and Thomas J. Prusa, “Antidumping”, NBER Working Paper No. 8398. 2001.
- Bown, Chad P., “Global Antidumping Database,”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no. 3737, available at http://people.brandeis.edu/~cbown/global_ad/ 2007.
- Bown, Chad P., “The WTO and Antidump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andeis University manuscript, Jul. 2007.
- Feinberg, Robert., “Exchange Rates and Unfair Trade, Review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 704-707. 1989.

- Hansen, Wendy L. and Thomas J. Prusa,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rade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of ITC Decision Making,"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5: 230-245. 1997.
- Hansen, Wendy L.,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Politics of Protectio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21-46. 1990.
- Knetter, Michael M., and Thomas J. Prusa, "Macroeconomic Factors and Antidumping Filings: Evidence from Four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1(October 2003), pp. 1-18.
- Krugman, Obstfeld and Melitz,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 & Policy", Ninth Edition, Pearson, 2011.
- Leidy, Michael P.,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MF Staff Papers*, Vol. 44. No. 1., March 1997.
- Michael M. Knetter, Thomas J. Prusa. "Macroeconomic Factors and Antidumping Filings : Evidence from Four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8010. 2000.
- Moore, M. O., "Rules or Politics?: An Empirical Analysis of ITC Anti-dumping Decisions", *Economic Inquiry*, Vol. 30, No. 3, July 1992.
- Prusa, Thomas J., "On the Spread and Impact of Antidumping,"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4(3): 591-611. 2001.
- Prusa, Thomas J., "Why Are So Many Antidumping Petitions Withdraw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3(1/2): 1-20. 1992.
- Takace, W. E., "Pressures for Protectionism: An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nquiry*, Vol. 19, No. 4, October 1981.
- World Bank, " Data by Countries", available at <http://www.data.worldbank.org>, 2011.
-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The "Antidumping Agreement"). WTO, Geneva. 1995.
- WTO,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on-line excel spreadsheet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 2011.
- WTO,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on-line excel spreadsheet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2011.

盧錦霞, “中日貿易摩擦研究”, 廣東工業大學, 2011.6.

唐宇, “反傾銷保護印發的四種經濟效應分析”, 財貿經濟, 2004.

丁勇, 李磊, 朱彤, “中國對外反傾銷的特點與影響因素研究”, 現代財經, 2008.

中國貿易救濟信息网 : www.cacs.gov.cn.

日本財務省貿易統計 : www.customs.go.jp.

ABSTRACT

Determinants of the China'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Japan 's products

Chang Hwan Choi*

China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Japanese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China'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Japanese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1997 to 2010.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Japanese products to China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like high unemployment,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and de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strength.

Key Words : Antidumping, Macroeconomic factor, Trade protectionism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